

서구의 생활정치 사상과 독일의 현실

서 창 훈*

본 논문의 일차 목적은 현재 한국의 학계와 언론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어 쓰이고 있는 생활정치의 개념을 서구의 현대 정치 사상사를 통해 정립하는데 있다. 이 글의 전반부는 이론부분으로 서구에서 최초로 생활정치 개념을 이론화시킨 기든스의 연구를 중심으로 생활정치에 대한 정의, 생활정치의 등장 배경, 성찰적 근대화와 생활정치의 관계, 생활정치에서 지구화가 갖는 의미, 생활정치와 해방정치의 차이 등을 추적해 본다. 기든스 이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벡의 제2근대와 하부정치 등의 개념들을 소개하고 두 사람의 근대화 이론 및 생활정치 개념이 하버마스의 '생활세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힌다.

생활정치는 기든스의 표현대로 생활 스타일로서는 유의미하지만 정치라 불리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후반부에서는 생활정치가 새로운 정치형태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활정치 발전의 구체적인 사례로 독일정부의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소개한다.

주제어: 생활정치, 해방정치, 하부정치, 성찰적 근대화, 지구화, 생활세계, 시민사회, 시민참여, 독일의회, 기든스

* 독일 뮌스터대학교 정치학과

1. 들어가는 글

한국에서는 최근 ‘생활정치’란 표현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언론, 정치인, 시민단체, 학자와 지식인층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생활정치를 거론하고 있지만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혹자들은 시민의 자각, 실천, 위기시대의 시대정신 등 의식과 발상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생활정치를 바라보는 가하면 혹자들은 웰빙문화, 의료, 사회보장, 주거, 보육 등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을 돌보는 정치로 이해하기도 한다. 또는 의회정치나 대의민주주의제와 구별되는 새로운 정치형태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과연 생활정치는 무슨 까닭에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며 어떤 개념의 대척에 놓여있는 것일까? 몇 가지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권력의 획득과 유지에 국한된 협의의 정치 개념에 반하는 일상에서의 정치일 수 있다. 둘째, 기존의 권력정치와 이념정치에서 벗어난 실용정치의 의미일 수 있다. 셋째, 민주화나 계급투쟁 등 거시정치에 맞선 미시정치이다.¹⁾ 넷째, 4대강 정비 등 대형국책사업과 비교되는 가계 관련 정치일 수 있다. 다섯째, 세계정치나 국제정치의 반대에선 지역정치이다. 여섯째, 결정권자 중심의 정치에 반해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이슈를 찾아 행동에 옮기는 시민, 사용자 중심의 정치이다. 혹은 중앙집권정치나 참여 연명층에 따른 세대정치의 반대편에 위치시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만의 생활정치를 말하기 전에 한국에 앞서 생활정치 개념을 계발하고 연구한 서구의 논의들을 추적해 보는 것이 올바른 순

¹⁾ 김호기 교수는 촛불집회에 참여정치, 생활정치, 인정정치, 위협정치, 가치정치, 디지털정치 등의 성격을 부여하고 그 영역 구분에 있어 현대 정치의 제도정치에 반대되는 생활정치로 구분한다(김호기 2008, 25).

서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에서 개인화, 성찰성, 선택, 윤리 등의 태그를 달고 생활정치에 관한 담론이 등장하게 된 이론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더불어 생활정치의 이상들이 독일의 현실 정치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생활정치의 사상사적 논의

1) 생활정치의 개념

서구의 인문사회 학자들은 1990년대에 접어들어 다양한 개념들을 끌어드리며 ‘생활’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개념 또는 용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했던 것들이지만 생활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었으며 한결같이 사회구조의 변동과 변화된 생활양식을 강조했다. 그 중 대표적인 개념들로는 하위정치(Beck), 인류발달법칙학(Bertaux), 생활통제(vécù), 생활경험(Ricoeur), 체험사회(Schulze), 신윤리 질서(Bauman), 아비투스(Bourdieu), 생활양식(Sicinski/ Roos) 등을 들 수 있다(Roos 1999). 이 개념들 중 일부는 과거를 성찰하고 더 긴 안목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인류의 학습능력에 초점을 두고 환경이나 생태 혹은 문화교류 등의 테마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다른 일부는 유전자 조작, 유해식품첨가물, 검증되지 않는 의약품, 환경호르몬 등 일상 생활에 직접 관련된 소재들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어느 쪽이 되었던 이 개념들은 공히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지, 그리고 이 결정들은 어떤 근본적인 요인들, 윤리적 원칙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이 근본요인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요인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지 아닌지 추적하는 작업을 선도했던 학자는 다름 아닌 기든스이다.²⁾ 이 과정에서 대두된 단어 ‘생활정치’는 1990년 대 영국을 비롯한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에서 화두가 되었다가 세기 전환 이후 ‘지구화(Globalization)’의 거대담론에 덮이어 차츰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는 생활정치 개념의 자체적인 한계로 인한 폐기나 구축 이라기보다는 상위개념 혹은 유사개념으로 흡수 성격이 강하다.

생활정치는 기든스가 성찰적 민주주의를 통해 근대화 과정의 토대, 결과, 문제점들을 알아내고(성찰하고) 근대화의 부작용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정치형태로 기획한 개념이다.³⁾ 그러나 생활정치의 개념은 일반 사회에서는 물론 학계에서조차 다양하게 이해되고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개념이 추상적인 데다 저자인 기든스조차 용어에 대한 명료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활정치에 대한 직접 서술은 그의 저서 『근대성과 자아정체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탈 전통의 정황에서는 범지구적인 영향들이 자아의 성찰적 프로젝트에 깊이 파고들며 반대로 자아실현의 과정들은 지구적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데, 생활정치란 여기서 자아현실화의 과정들에서 흘러나오는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갖는다(Giddens 1991, 214).

기든스에 따르면 생활정치는 전통의 고착성과 위계적인 지배 상황

2) 생활정치라는 용어가 등장한 저서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1991)부터 “Beyond Left and Right – the Future of Radical Politics”(1994), 그리고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1998)에 이르기까지 근대를 바라보는 기든스의 시각은 일관된다. 많은 비판과 논쟁들(Burkitt 1992; Hoikkala 2000; Roos 1999; Berger 1995; Caron 2003; Ferguson 2001; Garrett 2003)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생활정치는 기든스가 정책자문을 통해 블레어 정부의 복지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기 훨씬 전에 구상된 개념이다.

3) 기든스의 성찰적 근대화에 대한 벡의 평가는 “Der clevere Bürger”(Beck 1996a)를 참고.

으로부터의 해방을 전제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들이 일정수준의 행위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는다. 기존의 해방정치가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기회들을 획득할 것인가에 몰두했다면 생활정치는 무엇을, 또는 어떤 방식을 고를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기든스는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확산으로 인해 질적 차이는 있지만 ‘기회’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전제한 뒤 ‘선택’과 ‘스타일’로 정치의 관심을 옮겨 놓았다. 이제 후기 근대를 살아가는 개인들은 어떻게 선택의 자유를 획득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든스는 후기 근대성은 개인적 차원에서건 사회적 차원에서건 사회활동의 실존적 매개변수들을 급속하게 바꾸어 놓았고, 이 성찰적으로 재편된 환경에서는 성찰성을 통해 자아와 육체가 지구적 규모의 체계에 이어지므로 자아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치 스타일, 또는 스타일의 정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곧 생활(스타일)정치라고 주장한다(Giddens 1991, 212).

2) 근대의 자기 성찰

생활정치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가 전제하고 있는 ‘후기 근대성(late modernity)’ 또는 ‘성찰적 근대성(reflexive modernity)’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성찰적 근대화론은 기든스가 올리히 벡, 스코트 래쉬와 함께 내세웠던 테제로 그들의 공동저서 『성찰적 근대화』를 통해 주로 소개되었다(Beck, Giddens, and Lash 1996).

성찰적 근대화의 출발점은 근대의 유지, 발전이다. 마르크스의 예견과 달리 자체 학습능력에 의해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재생산하는 것처럼 성찰적 근대화론자들은 근대 역시 근대의 핵심인 합리성

기제가 근대가 당면한 한계와 모순을 스스로 극복해 나가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성찰적 근대화론의 기저에는 전통사회, 근대, 후기근대의 도식이 깔려있다.⁴⁾ 전통사회는 한편으로는 의식을 통해 과거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반복을 통해 과거를 미래와 연결시킨다. 여기서는 지역마다 다양한 관습과 풍습이 존재하며 강한 구심력을 가진 지역들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재생산된다. 개인의 삶 역시 환경, 장소, 지역사회 등에 단단히 결부되어 있다. 근대에는 계몽주의와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과학과 이성이 전통사회의 풍습과 규례들을 대체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에 대한 부단한 신뢰와 일직선적 진보사관은 20세기에 등장한 전체주의 권력, 세계적인 경제공황과 금융위기, 생태계 파괴에 따른 전 지구적 환경 문제, 문화적 충돌과 테러리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전쟁의 위험 등에 직면해 심각한 회의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기든스는 자가 치료법에 착안하여 이 위기상황으로부터의 출로를 근대의 밖이나 근대의 너머에서가 아니라 현재를 비판적으로 해부하며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근대 자체에서 찾는다.

기든스의 시야에 들어온 근대는 스스로 한계와 모순을 낳을 만큼 비대해 있고, 동시에 스스로 이 한계와 모순을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다. 따라서 근대는 종언되거나 폐지된 것이 아니라 성찰과 자가 치료가 가능한 시대로 ‘급진화(radicalized)’한 것이다. 이 급진화된 근대의 핵심은 지식과 행위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인 수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되풀이되는 이 일련의 과정이 곧 성찰성이다. 성찰성은 근대의 새로운 작동기제로서 사회생활에 대한 체계적 지식 형성을 통해 체계 재생산의 근본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4) 기든스는 의도적으로 탈근대라는 표현을 피한다. 탈근대는 근대와의 단절을 의미하며, 근대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전통의 복원이나 재창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관찰된다.

근대사회에서 생활의 성찰이란 일상의 사회사들이 저마다 관련 정보에 귀 기울여 끊임없이 검토, 개선됨으로써 이 일들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다(Giddens 1995, 54).

성찰성은 신뢰와 위협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후기 전통의 질서에서 위기(risk)는 위험(danger)일 뿐만 아니라 기회이기도 하다. 자아의 측면에서 위험에 직면한 개인들은 이 위험에 대한 프로필을 작성해 놓고 이사, 취업, 여가 등의 일상계획이나 장래계획을 짤 때 함께 고려해 놓는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은 마찬가지로 성찰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어떤 동네에서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거나 전문가가 이런 사건을 문제 삼을 경우 제도적 성찰은 새로운 어린이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이 조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조직들의 미래에, 심지어의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 결과 새로운 위험이 등장할 수도 있다.⁵⁾ 이러한 위험과 성찰의 변증법적 작용은 급진화된 근대의 또 다른 주요 양상이다.

근대의 급진화와 병행해 진행되는 또 하나의 변혁과정은 다름 아닌 지구화(Globalization)이다. 기든스는 지구화를 “장소들을 서로 묶어주는 전 세계적인 사회적 관계들의 강화”(Giddens 1995, 85)라 정의한다. 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 수만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쳐 동일한 모습으로 현재되는 지구화 시대에는 전통이 더 이상 사람들의 행위규범으로 기능하지 못하며, 따라서 개인들의 삶은 매일이 새로운

⁵⁾ 기든스에 따르면 위기는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의 식민지화’이며, 사회복지 혜택을 신청자는 사람들의 미래 역시 식민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Giddens 1991).

일상실험의 연속이 된다. 전통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늘 바뀌는 현상 속에서 스스로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하며, 개인들 역시 행위규범의 부재 속에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3) 제2근대와 지구화

성찰적 근대의 공동주창자인 올리히 벡은 급속한 사회구조변동에서 직면하여 기존의 사회학적 개념들로는 21세기의 사회현상들을 올바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보고 ‘성찰적 근대’를 새로이 이론에 도입했다. 벡의 성찰적 근대 개념에는 제1근대(erste Moderne), 위기사회, 제2근대(zweite Moderne)로 이어지는 세 단계의 근대가 등장한다. 제1근대는 계몽주의부터 산업화와 관료화가 진행되던 시기이며 시민계층의 등장과 민족국가 형성 시기와도 맞물려 있다. 제2근대는 지구화, 노동관계의 불확실성, 세계사회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현재를 일컬으며, 위기사회는 제1근대와 제2근대의 매개점을 형성한다.

벡은 근대의 중추를 형성했던 개념들, 민족국가, 민주주의, 개인, 나아가 근대 그 자체까지도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다. 게다가 근대 산업사회의 운영 기제였던 테일러리즘적 노동위계질서와 포디즘적 대량생산 및 운영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 결과 경제, 경영, 소가족모델 및 관련 역할규정 역시 급변하게 되었다. 벡에 따르면 근대를 지탱해 온 핵심기제들의 쇠퇴와 소멸은 사회국가⁶⁾ 유지에 대한 불안, 건강과 삶에 대한 위협, 진보, 과

⁶⁾ 사회국가(Sozialstaat)는 전 국민이 사회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과 사회정의에 힘쓴다는 점에서는 복지국가(Wohlfahrtsstaat)와 같지만 이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가 경제의 운용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와는 구별되는 독일의 독특한 국가 개념이다.

학, 전문가들에 대한 불신 등 새로운 불안들을 야기하게 된다. 낡은 민족국가 산업사회의 자명성 또한 지속적 성장이나 지구화 같은 정치적으로 열려 있는 새로운 개념들에 의해 깨지고 말았다. 공고화된 복지의 담벼락 뒤로 사회적 여건과 개인들의 생애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셈이다.(Beck, Giddens, and Lash 1996, 21)

벡은 근대의 합리성과 통제의 직선적 증가, 또는 지식과 논증을 통한 변화를 문제시 하지는 않는다. 근대의 위기는 산업사회에 의해 생겨나고 산업사회에 의해 관철된 일상(Routine)과 확신의 제도적 버팀목들이 사라져가는 것에서 기인하며 그 결과 불안, 정치화, 경계를 둘러싼 싸움들이 확산되고 있다고 본다. 제2근대는 제1근대가 낳은 이 위기상황에 대한 성찰을 통해 등장한다. 지구화로 요약할 수 있는 제2근대에서는 다원화, 다면화, 지분화, 정치화 된 세계사회가 전면에 등장하며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힘입은 사회적 소통의 활성화, 그리고 경제 및 기술 영역의 정치화를 기반으로 제1근대의 제도권 정치를 벗어난 하부정치(subpolitics)⁷⁾가 새롭게 대두된다(Beck 1997, 1996b).

성찰적 근대화는 기든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인을 전통적 억압과 위계에서 벗어나게 하며, 벡의 표현을 빌리면 개인을 민족국가의 컨테이너로부터 풀어준다. 따라서 개인은 사유의 중심, 정치의 중심으로 재등장하며 이 정치는 이제까지 '하위' 또는 '저급'으로 취급 받았던 일상의 정치, 곧 생활정치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해방에 치중되어 있던 근대적 정치의 주된 고민 역시 해방이 가져올 새로운 문제들, 적절한 선택, 자아실현 등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게 된다(Giddens 1991).

⁷⁾ 하부 정치(subpolitics)는 제도 정치와 중앙 집권 통치가 약화됨에 따라 기존의 제도적인 정치 체제 외부에서 시민, 이익단체, 사회단체, 사회 운동, 전문가 집단, 현장 활동가 등이 새로운 행위 주체로 등장하여 사회 계획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밑으로부터 정치를 말한다.

4) 공론장과 생활세계

성찰적 근대화론은 근대를 ‘미완의 기획’으로 인식한 하버마스의 철학적 사유를 그 기저에 두고 있으며 기든스의 생활정치 개념 역시 하버마스의 ‘생활세계(Lebenswelt)’로부터 많은 부분을 차용하고 있다.

일찍이 민주주의와 시민 법치국가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하버마스는 ‘공론장(Öffentlichkeit)’과 생활세계, 두 개념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켜나갔다. 하버마스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른 무엇보다 정치적 참여에서 찾는다. 정치참여는 “성숙한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기능하는 공론장에서 통찰력 있게 자신들의 의지를 위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사회적 삶을 자신들의 손으로 세워나갈 때”, 이렇게 “개인의 권위를 합리적 권위에 넘겨줄 때” 실현 가능하며, 인류의 자결이 가능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된다(Habermas 1973, 13).

그러나 근대 입헌국가에서는 실질적인 국민의 통치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시민들의 의지를 위임 받아 대표해야 할 의회의 권한이 축소되고 의회에서 행정부 및 정당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공론장이 침체되었기 때문이다. 참여가 아닌 외부결정에 의해 행정부가 이루어지고 정당은 독자화된 데다 의회의 의미마저 더욱 축소되어 시민은 단순한 고객에 불과한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다(Habermas 1973, 20).

형용사 “공공의(öffentlich)”는 모두에게 관계되며 따라서 사회적으로 조절되어야 하는 사안을 지칭한다. 17세기 중반 시민계층이 등장하면서 커피숍, 살롱, 회식모임(Tischgesellschaften) 등을 중심으로 공론장이 형성되었으며 초기 문학과 예술 위주의 소재에서 경제와 정치로 점차 대화의 영역이 확대되어 나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초석이 될 공론장은 19세기 중반 상업적 대중매체들이 등장하고 20세기 (전제)국가들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퇴화하고 만다.⁸⁾ 이 공론장이 고유의 비판적 기능

을 회복하려면 우선 정치적 공론장의 지배세력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구조적인 이해갈등을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일반 이해의 견지에서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Habermas 1982, 339-342).

공론장의 작동원리는 소통이며, 소통적으로 행위하는 주체들은 “항상 생활세계의 지평에서” 대화한다. 이 생활세계는 화자와 청자가 만나고 있는 선형적 장소로서 행위 주체들의 참여자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의심할 여지없이 주어져 있는 것이며 붕괴될지언정 문제시되지 않는 공간이다. 생활세계의 확실성은 대화의 간주관성에 붙박여 있는 사회적 선형성에 정초하기 때문에 초침되지 않으며 기만할 수 없는, 원칙상 고갈되지 않는 맥락을 형성한다(Habermas 1981, 198-202).

〈표1〉 하버마스, 기든스, 벡의 근대 구분

	기준	근대 사회의 진화과정 및 특징		
하버마스	생활세계와 체계의 관계	생활세계와 체계의 미분화 단계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 단계	생활세계와 체계의 갈등 단계
기든스	성찰성	전통사회 환경, 장소, 지역사회, 제도 등에 결속. 관습과 풍속	근대 계몽, 지식과 이성에 의해 관습과 전통을 대체	후기 근대 성찰적 지식획득, 생활정치, 지구화, 시간과 공간의 분리, 사회적 행위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
벡	위험		제1근대 합리주의, 예측가능성, 과학기술에 대한 무한한 신뢰	위기사회 국가, 경제, 사회, 환경 등 제반 영역에서 위험요소 등장

8) 하버마스는 이 과정을 ‘재 봉건화’라 일컫는다.

하버마스는 근대사회의 주된 특징을 사회 분화과정에서 일어난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로 요약한다. 다시 말해 일반화된 조절매체인 화폐와 권력의 형성에 의해 사회의 물질적 재생산이 문화적 재생산으로부터 독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계속해서 문화적 재생산에 침투한다는 것이다. 이 특징을 기준으로 하버마스는 사회의 분화 및 진화과정을 세 단계로 나눈다. 첫째, 전통사회에서는 생활세계와 체계가 아직 미분화되어 있고 사회의 문화적 가치영역이 물질적 재생산을 주도한다. 둘째, 종교개혁부터 산업화에 이르는 근대화 단계에는 체계가 생활세계에서 떨어져 나오며 체계의 조절매체가 사람들에게 공통된 문화적 가치와 규범들에서 분리된 행위논리를 강요한다. 셋째 단계에서는 생활세계와 체계의 갈등이 밖으로 불거져 나온다(Habermas 1985, 189). 이제 남은 관심사는 어떻게 공론장을 복원할 것인가, 그리고 주체들이 어떻게 체계의 조절매체로부터 자유롭게 생활세계의 지평에서 조우할 것인가이다.

기든스와 벡의 근대 구분, 전자의 생활정치와 후자의 하부정치,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근대의 새로운 성격으로 제시한 성찰성은 모두 체계와 생활세계에 관한 하버마스의 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든스와 벡은 근대성의 결정체로서의 체계가 끊임없는 팽창의 결과 내적 모순으로 인한 한계상황에 봉착했다고 인식하고 체계의 문제들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생활세계로 향한 문을 열어 두었다. 이제까지 삼투막으로 가로막혀 체계의 일방적인 하달을 받았던 생활세계는 생활정치와 하부정치를 통해 체계와의 갈등을 본격화하고 억눌려 있던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와 가치 추구를 외면화한다.

3. 생활정치와 시민참여

1) 생활정치의 정체성

생활정치에 대한 기든스의 고민은 변화하는 일상생활의 구조, 그리고 인민들과 국가체계들 간의 관계에서 시작된다.⁹⁾ 그는 생활정치란 정치를 자기결정과 평등권의 원칙 위에 세우기 위해 좌파의 기존 해방정치로부터 ‘단절(break)’하는 것이며 해방정치는 생활정치에 의해 역사적으로 ‘초월(transcended)’되었다고 표현한다. 그에게 이 ‘낯은’ 개념들은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을 논의하는 데 빈약한 출발점을 제공한다(Hoikkala 2000). 왜냐하면 그의 생각에 근대 정치의 근간을 이루었던 종교와 전통의 교조적 명령으로부터의 해방, 관습과 편견으로부터의 해방, 가부장제로부터의 해방,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등은 - 최소한 서구 선진국들에서는 - 어느 정도 성취되었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해방정치가 가져다 준 선택의 자유 속에서 자아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치형태, 즉 생활정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당시 서구의 좌파가 노동과 자본 간의 갈등 해결에 속수무책이며 사회민주주의 또한 개인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은 기든스로 하여금 새로운 정치개념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다.¹⁰⁾

9) “내가 책들에서 개인주의 부흥에 대한 말하거나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도록 노동당을 설득할 때면 변화하는 일상생활의 구조와 인민들과 국가체계들 간의 관계에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틀을 잡아주었던 습관, 전통과 문화들은 우리 삶 깊숙한 곳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 세대들보다 개인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더 열린 환경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많은 해방적 요소들을 담고 있지만 분명 새로운 근심거리와 문제들도 야기합니다”(Giddens 2003, 388).

10)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생활형태의 개인화와 다원주의가 갖는 커져가는 의미에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한도 내에서 이 새로운 개인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의 자기중심적인 개인을 동일시해야 하며 어느 선에서 막아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는 ‘자율적인 개인’ 상에 항상 싸워왔다”(Giddens 1999, 47).

해방정치와 생활정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가 사회적 불평등, 착취, 억압 등을 중심에 두는 반면 후자는 후기 근대사회의 특수한 특징들과 개인들의 처지를 반영하며 개인의 선택을 핵심의제로 설정한 것에 있다. 단순화해 표현하자면 생활정치는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조건들이나 개인의 행위 자율성 획득 후 전개될 상황들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전통과 위계적 지배의 고착성으로부터의 해방은 생활정치를 위한 전제이지만 여타의 해방정치적 요소들은 개인들의 생활스타일 선택을 위한 충분조건일 뿐 필요조건은 아니다(Giddens 1991, 214). 후기 근대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며, 이 투영된 상에 대한 개인들의 성찰 또한 상이하므로 동일한 조건에서, 심지어는 비참한 물질적 제약 가운데서도, 선택의 가지 수는 줄어들지언정 선택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것이다.

생활정치에 의한 해방정치의 초월 또는 단절 등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둘은 계속해서 교차한다. 기든스 스스로 밝혔듯이 생활정치의 이슈들은 해방의 문제들을 불러일으키며, 거꾸로 해방정치의 이슈들은 생활의 문제들을 야기한다. 그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성장과 지구 환경문제 사이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세계 빈민의 해방과정은 아마도 선진국들에서 획기적인 생활양식의 변화가 소개될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생활정치와 해방정치의 관계설정에서 기든스가 전통마르크스주의의 계급관점에서처럼 사회적 집단들을 대리자의 능력을 지닌 예정된 사회적 카테고리로 파악하는 전통적인 사회학적 관점과 결별하고 생활정치의 이슈가 되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형성된다고 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생활정치에서 정치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들을 뜻한다.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이 사회의 범주이다. 이 사회는 세계사회까지 확장되며 결코 개인이 일상을 살아가는 가정이나 직장, 지역사회, 국가사회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찰을 통한 선택 외에 기든스가 생활정치를 통해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범지구적인 영향들이 자아의 성찰적 프로젝트에 깊이 파고들며 반대로 자아실현의 과정들은 지구적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Giddens 1991, 214), 미시영역에서 벌어지는 개인 생활과 거시영역에서 벌어지는 지구화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이다.

이미 경제블럭 내부와 경제블럭들 사이의 자본, 상품, 노동 거래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자유로운 상업경제적 지구화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지구화는 환경이나 경제적 연루, 국민국가 간의 늘어난 접촉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혁명과 정보기술의 확산을 통해 우리의 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공간과 시간의 변혁에 관한 것이며 존재와 부재의 상호교차, 먼 곳에서 지역적 맥락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사건과 사회적 관계들의 얽힘이다(Giddens 1999, 41; Shaw 2000, 21) 지구화는 정치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들의 혼합에 의해 발전된 ‘과정들의 복합체’로서 국가, 기업, 여타 행위자들이 지구화의 발생과 심화에 능동적으로 기여했으며 개인들 역시 의식, 무의식중에 지구화 과정에 참여하였다. 생활정치는 개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더욱 극대화와 전지구적 차원에서 파생될 결과까지도 예측하기를 바란다.

2) 생활정치의 주체

생활정치는 이제까지 체계에 구속되어 있던 개인을 재발견하는 작업이며 해방정치에서 계급으로, 국가정치에서 국민으로 규정되던 집

단주체에서 개개의 자연인으로 되돌려 놓는 과정이다.

생활정치에는 이중의 의미에서 개인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첫째, 푸코가 간파한,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며 개인들의 침실 속까지 파고들었던 국가권력, 기율권력, 지식권력에 대해 사람들은 점점 더 거세게 저항하며 스스로를 권력의 지배대상에서 독립적인 주체로 회복시키고자 한다. 개인의 정체성은 더 이상 전통과 관습, 권력의 지시, 권위의 가르침, 이념의 선결성 등에 의해 고착되지 않으며 끊임없이 바뀌는 자서전적 이야기들을 응집해 유지하는 과정을 통해 성찰적으로 조직된다. 후기 근대사회에도 상업화에 의해 생산된 표준화가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다원화와 권위의 다양함이 주를 이루며 개인은 협상된 선택으로서의 생활양식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자아는 성찰의 핵심으로 우리의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우리에게 행위에 대한 이유를 말해 준다. 이 자아의 성찰은 무의식의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비의식의 수준에서 더 잘 작동한다(Giddens 1991, 35). 둘째, 생활정치는 생활의 정치임과 동시에 생명의 정치로 인간의 육체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유전자 조작을 비롯한 각종 유전자 기술, 인공수정, 복제, 동성결혼, 안락사, 출산 등 생명에 직접 관련된 이슈들과 웰빙, 피트니스, 여가활동 등 건강에 관한 이슈들은 생활정치의 핵심의제를 형성한다. 육체는 능동적 매체이므로 육체의 소유권을 둘러싼 투쟁과 재생산의 정치는 생활정치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인간성 및 개성과 관련된 중요한 권리들을 제기하고 여성운동이나 제3세계 활동 등의 고전적 해방정치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3) 생활정치의 영역

생활정치는 단순화하면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개인들의 고려의 문제이며 개인의 자아, 정체성, 자아성찰, 생로병사, 웰빙, 라이프스타일 등에 관련된 정치를 말한다. 다시 말해 생활정치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과 결정들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일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매일 선택을 할 때 이 선택들이 토대로 삼고 있는 모든 원칙들의 복합체이기도 하다(Hoikkala 2000). 심지어 벡은 생활정치를 ‘노동, 생활, 소비의 정치화’라고 표현했다(Beck 1996a).

후기 근대사회의 개인들은 교육, 직업생활, 사랑, 개인적 관계와 자기계발 등의 프로젝트에서 예전보다 훨씬 큰 선택의 가능성을 갖게 되었으며 선택에 따라 감수해야 할 위험 또한 선택가능성에 비례해 늘어났다. 그래서 특정한 윤리적 목적에 따라 자신의 삶 속에서 사려 깊게 선택해야 할 중요성 또한 더욱 커졌다. 성찰적 자기 기획은 심신 수련과 건강 등 개인의 내부에서부터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국가사회, 세계사회로까지 확장되며 기존의 정치가 차지하고 있던 모든 영역에 함께 자리 잡는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개인들은 국가나 계급, 제도 등에 의한 결정에만, 또는 그것들을 위한 결정에만 순응하지 않으며 주어진 결정들 가운데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그 무엇을 선택하고자 한다. 생활정치가 기존의 정치가 미처 관심 갖지 못했던 일상의 ‘작은’ 문제들을 새로운 정치의제로 제시하는 것은 분명 새로운 일이다. 그러나 생활정치가 갖는 더 큰 함의는 모든 정치 영역을 개인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것에 있다. 생활정치는 근대의 정치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며 모든 선택은 ‘나’에서 출발해 ‘나’로 돌아온다. 그래서 생활정치는 성찰적(reflexive)일뿐만 아니라 재귀적(reflexive)이다.

생활정치가 개인에서부터 전 지구까지 편재한다고 해서 기존의 정치지형과 정부의 영역을 해체하는 것은 아니다. 벡은 기든스의 생활정

치 개념을, 기든스는 벡의 하부정치 개념을 서로 교차해 사용하면서 정당과 의회정치의 고유한 역할은 지속될 것이라 예견한다. 사회운동, 시민단체, 비정부기구들과 다양한 시민연합들이 지역에서부터 지구적 수준까지 안정적인 역할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곧 탈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에 따르면 이 단체들이 국가와 정부가 실패한 곳에 대신 뛰어 들 수 있다거나 정당을 대신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며 국민국가와 정부는 변형되고는 있지만 오늘날의 세계에서조차 여전히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Giddens 1999, 67; Beck 1996a).

4) 생활정치의 척도

후기 근대와 지구화를 특징짓는 시간과 공간의 변혁은 의심과 상대주의를 팽배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신뢰와 위험 같은 개념들을 부각시켰다. 새로운 형태의 개인-공동체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약하고 부드러운 권위구조를 만들어냈다. 생활은 개인화되고 불확실은 점증한다. 생활의 개인화는 또한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주의의 발판을 제공한다. 예전에는 관습과 전통 또는 자연에 의해 제한받았던 일상생활에서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여기서 기든스는 ‘제2의 기회’라는 개념을 고안해 냈다. 이 개념 하에서 사람들은 자기 계발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점쳐보고 은퇴, 실직, 이혼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새로운 시작은 더 낫지는 않을지언정 최소한 다를 수는 있다. 현대생활에 나타나는 이런 유형의 가능성들은 윤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일상 현실에 자동적으로 결부시킨다. 가능성과 선택에 대한 압박은 사람들을 하여금 최소한 행복과 개인적 관계들의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며 ‘좋은 삶’과 ‘행복’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Hoikkala 2000).

국가의 간섭이나 이념, 전통적 규범 등의 부재를 전제하고 있는 후기 근대사회에서 생활정치는 시민들에게 일정수준의 윤리적 시민 조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며, 기든스는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 변혁이 벌써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따라서 그는 개인화에 ‘나-세대’(Ich-Generation)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비판한다. 젊은 세대들은 광범위한 스펙트럼에서 기성세대들보다 도덕적인 사안에 더 민감하다. 그들은 단지 이 가치들을 전통과 연결하지 않을 뿐이며 생활형태를 고민할 때 전통적인 형태의 권위에 결정권을 주지 않을 뿐이다. 이 도덕적인 가치들의 몇 가지는 환경보호, 인권, 성적 자결성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탈 물질적이다(Giddens 1999, 48f).

우리 시대를 도덕적 타락의 시대가 아니라 도덕적 교차(Übergang)의 시대로 보아야 한다. 제도적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동일한 것이 아니며 사회의 연대에도 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연대를 위한 새로운 길들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 단결은 국가의 간섭을 통해, 즉 위로부터, 또는 전통에의 호소를 통해 보장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전 세대들보다 더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은 꾸려가야 하며,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선택한 생활방식이 가져올 결과들에 대해 보다 의식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오늘날의 과제는 개인적 책임과 국가적 책임 사이에 새로운 균형을 잡는 것이다(Giddens 1999, 49f).

기든스가 생활정치 및 ‘개인화’와 관련해 도덕과 윤리의 의미를 누차 강조하는 이유는 지구화 과정을 통해 점차 사라져 가는 전통을 대신할 선택의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선택의 준거가 없다면 성찰의 기제도 작동할 수 없으며 늘어난 선택의 가능성은 개인들을 향락이나

쾌락, 소비, 나태, 이기, 폭력, 무관심 등의 늪으로 그릇되게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과거 해방정치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했던 이념을 대체한다. 이념은 그 속성상 다른 이념과 적대적인 모순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해방정치의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이념을 관철시키고 다른 이념을 멸절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만 했다. 계급투쟁과 반제국주의투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 이념투쟁의 공간에서 행위자들은 공론장의 형성은 말할 나위 없으며 대화에 조차 결코 이를 수 없다. 기든스가 급진적 정치의 재구성을 위해 내세운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이념은 보다 더 보편적인 가치 또는 윤리도 대체되어야 만 한다. 이것들이 개인들의 성찰과 선택의 기준이 되면 지구적 차원 빈곤, 복지, 분배 등의 문제도 새롭게 조망될 수 있을 것이다.

4. 독일 정부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1) 선택을 위한 조건들

기든스의 생활정치 개념을 비판적으로 해석한 로스는 생활정치가 직접적인 정치적 사회적 관심사들보다 더 근본적인 현실을 다룬다고 보고 생활정치의 영역을 개인적인 생활경영과 정부 차원의 기존 정치 사이의 중간지점에 위치시킨다. 그에 따르면 생활정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가능성, 대안들, 인간관계성, 자아실현, 빈곤과 복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집단들이나 사회를 움직이는 공동 결정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생활 그 자체는 생활정치라 할 수 없으

며 다양한 방식 속에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생활만이 생활정치가 되는 것이다. 생활정치의 관심사는 특정 사회 집단에 정착된 생활인 것이다 (Roos 1999).

사실 기든스의 정치정치 논의는 독일에서 큰 반향을 얻지 못했다. 정치스타일로서의 생활정치는 성찰적 근대화 담론에 가담했던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만 간헐적으로 논의되었고 ‘생활정치(Lebenspolitik)’라는 단어 역시 생명정치, 생명에 관한 정치의 의미로 국한되어 사용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개인화 개념을 제외하면 생활정치와 자아정체성에 관한 기든스의 주장이 하버마스의 ‘체계-생활세계’ 담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었고, 다음으로는 기든스의 생활정치 이론이 제시한 윤리와 자아성찰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 주기에 너무 부드럽고 무른 고리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인주의가 만연한 미국과 영국에 비해 독일은 상대적으로 공공과 사회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 개인화된 자아실현보다는 참여와 연대를 통한 자아실현, 현대 일상에서 참여, 연대가 나타나는 방식에 관심이 많았다.

생활정치는 개인적인 선택들의 합이 모여 공동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그리고 개인들이 이 결정에 이르는 과정뿐만 아니라 결정 집행에 까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공공’은 자기 가족, 이웃, 인접환경, 하부분화, 시민활동, 지역 시민사회 등의 다채로운 공동체들의 연결을 일컫는다. 하지만 시장과 판매, 지역과 국가 제도들의 활동, 그리고 그것들의 영향들 역시 ‘공공’에 해당한다. 생활정치의 개인부터 세계사회까지를 아우르지만 그 주 대상 영역은 지역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래야 생활정치는 이제까지 비워져 있던 개인과 사회 사이의 영역, 나아가 개인과 국가 사이의 영역을 오가며 채울 수 있다(Roos 1999).

개인들이 의사결정 과정과 집행에 직접 참여하며 선택의 가능성을

체험하고 이를 통해 가시적으로,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의 시민단체, 봉사단체, 취미모임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즉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생활정치는 구현될 수 있다.

기든스는 생활정치에서 정부에 부과된 핵심과제 중 하나는 다양한 개별이해들의 상충하는 요구들을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조율하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Giddens 1999, 68). 그러나 기든스 자신의 생활세계에 대한 정의에 따라 개인들이 성찰을 통해 자아현실화의 과정들에서 흘러나오는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정부로 대변되는 기존의 정치제도는 개별이해들의 이견 조율 이외에도 크게 세 가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① 다양한 선택 가능성의 제공, ② 개인들의 자율성 확대, ③ 성찰과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할 시민 교육.

첫째, 개인들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교육, 복지, 보건, 여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화, 다원화된 저마다의 윤리기준에 맞추어 자기만의 생활스타일을 기획하고 선택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선택가능성이 주어져 있어야 한다. 제도적 장치들이 단혀 있고 정부의 정책들이 획일화, 고정화 되어있으면 개인들의 자율성과 합리적인 선택의 능력은 전혀 발현될 수가 없다. 특히 개인의 책임성과 자율성 향상의 미명하에 복지정책들을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생활정치를 저해하게 된다. 근대 국민국가의 복지정책은 해방정치적 요소들을 지니고 있지만 생활정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가 되므로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단 복지정책의 수혜여부는 개인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인들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자율성은 방종이나 자유와 구별되며 그 개념상 외적 강제가 없더라도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삶을 경영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래서 자율성은 끊임없이 확대되어야 하며 자율성의 확대는 결코 체제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다양한 선택 가능성과 합리적인 선택 능력이 주어졌다고 해도 생활정치를 통해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셋째, 생활정치의 출발점인 성찰과 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어떤 이슈들이 개인의 자아현실화와 관련된 것인지 선별할 수 있는 능력 등은 자동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적인 노력은 물론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속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 교육은 이데올로기 교육이 아니라 거꾸로 이데올로기를 골라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드는 교육이며, 획일화된 제도교육이 아니라 개인들이 저마다의 윤리 기준에 따라 자아를 발현해야 하는 필요와 그 방법에 관해 배우는 교육이다. 개인들에게 이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생활정치는 그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며 다양한 선택 가능성과 자율성이 담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인들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언정 올바른 선택은 할 수 없을 것이다.

독일은 민주주의 의식의 공고화와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1952년 정치교육중앙회(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를 설립했다. 2001년 1월 24일 자 ‘정치교육중앙회에 관한 법률’은 위원회의 업무를 “교육 활동들을 통해 정치적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주주의 의식을 공고히 하며 정치 참여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치교육중앙회는 정치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인쇄출판물을 제공하고 총회, 강연, 세미나 등의 행사들을 개최하며, 인정받은 정치교육 담당자나 단체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온라인 포털 ‘ww.bpb.de’

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회는 운영을 위해 매년 2천7백만 유로에 가까운 예산을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받고 있으며¹¹⁾ 정부의 관변단체가 아니라 객관적인 시민교육 기관의 성격을 확고히 함으로써 반세기가 넘는 동안 수차례의 정부교체와 정당을 비롯한 각종 정치단체들의 크고 작은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다.¹²⁾

이 기관은 계간지 「정치교육 정보(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와 주간지 「정치와 현대사(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를 발행하고 있다. 「정치와 현대사」에는 매주 특정 테마를 선정해 관련 논문들과 에세이들이 게재되며 주간지 「의회(das Parlament)」¹³⁾와 함께 제공된다. 「정치교육 정보」 역시 정치학, 경제, 사회, 역사 등의 분야에서 월 테마를 선정해 다루며 무료로 제공된다. 여기에 게재된 기사들은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현대사 등 주제별로 분류되어 단행본과 전집으로 재 발간된다.

이 밖에도 정치교육중앙회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치교육과 정치에 대한 관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다. 1971년부터는 출판물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더불어 참신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시된 수업과제들을 풀어보고 그 결과물을 제출해 평가 받는 이 행사에는 인근의 독일어 사용국가인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학생들을 포함하여 매년 3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참가하고 있다.

11) 정치교육중앙회는 2002년과 2003년 약 26,800,000유로와 26,700,000유로를 각각 책정 받았다. 이 중 2002년에도 18,000,000유로가, 2003년에는 16,700,000유로가 인쇄출판과 행사업무에 지출되었으며 나머지는 교육자들 지원, 대외홍보비 및 기타 업무용으로 지출되었다.

12) 최근에 들어 정치교육중앙회의 안내책자나 홍보영화 등 몇몇 교육 자료들이 반유대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제기되었지만 시민들의 동조를 구하지는 못했다.

13) 1952년부터 2000년까지 이 주간지 역시 정치교육중앙회에서 발행했으나 2001년부터는 독일연방의회가 직접 발행인이 되었다.

정치교육중앙회는 또한 언론인들을 주 대상으로 한 월간지 ‘회전판(drehscheibe)’을 발행한다. 이 잡지는 매월 지역 언론들에서 나온 최고의 아이디어와 개념들을 소개함으로써 아이디어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회는 그 밖에도 청소년잡지 「플루터(fluter)」의 발행 책임을 맡고 있다. 16세부터 22세 사이의 이제 막 투표권을 갖게 된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 온라인잡지는 베를린에 편집부를 두고 매월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테마’, ‘독서’, ‘필름’, ‘동향’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8세부터 12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 교육 역시 실행되고 있다. 중앙회는 2002년 6월부터 어린이관련 홈페이지¹⁴⁾를 개설해 가정에서의 민주주의부터 유럽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적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만화와 게임, 사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내용들을 모아 책으로 출판하고 있다.

2) 『시민참여의 미래』

다음으로는 독일 14대 국회 여론조사위원회¹⁵⁾의 보고서 『시민참여의 미래(Zukunft des Bürgerschaftlichen Engagements)』를 바탕으로 시민

¹⁴⁾ www.hanisauland.de

¹⁵⁾ 여론조사위원회는 독일 연방의회의 초 정파적 실무그룹으로 상이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인종적 관점들이 고려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들을 풀어야 할 임무를 맡고 있으며 소수자들의 의견을 배려하면서도 국민의 대다수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의회 내 모든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소속 위원들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된 당대 국회의 회기 내에 문제가 된 사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각 위원회는 보고서의 내용, 작업 기간 등의 조율과 문서 작성, 홍보물 제작 등의 실무 작업을 위해 비서를 둔다. 통상적인 업무 외에도 위원회는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가들과 정부 각 부처의 대표자들과 함께 공청회에 임해야 한다. 여론조사위원회는 1969년 연방의회의 업무규정을 통해 처음 기획되었고, 1971년 첫 위원회의 발족 이래 2007년 현재까지 24차례 위원회가 꾸려졌다.

참여와 시민사회에 대한 독일 정부의 인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1999년 12월 14일 독일연방 하원에서 사민당, 기민련, 녹색당, 자유당의 연합으로 공동발의 되어 모든 정당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시민참여의 미래’ 여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독일에서 자발적인, 물질적 이윤에 맞춰지지 않고 공익에 정향된 시민 참여(Engagement)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치적 전략들과 조치들을 개발”(Enquete-Kommission 2002, 2)하는 데에 그 설립 목적을 두었다. 위원회가 시민 참여의 다양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심을 가진 조사대상은 실로 부지기수이다. ① 각종 연합, 모임, 종교단체, 자선단체 및 기타 공익단체들, ② 자원봉사활동, 의료봉사활동, 무료급식단체, ③ 자활단체, 주민단체, 부조단체, ④ 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s), 국민발의, 기타 직접민주주의적인 시민참여, ⑤ 정당과 노조의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⑥ 기업과 재단들의 공익사업 등.

위원회는 2년이 넘는 조사활동을 마치고 낸 보고서를 통해 시민참여는 다양성을 의미하며, 이 모든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이해가 없이는 이 활동들의 범위와 이 활동들이 공동체에서 갖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들은 매일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서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결속력을 갱신해 주며 연대감, 소속감, 상호신뢰를 만들어 낸다. 다시 말해 시민들은 참여를 통해 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결속과 이해, 공통의 규칙, 규범, 가치 등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국가 제도들에 대한 신뢰 등 우리가 오늘날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Enquete-Kommission 2002, 2). 위원회는 시민사회에 대한 주요 입장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① 관계 틀로서의 시민사회(Bürgergesellschaft)

여론조사위원회는 ‘시민의’라는 표현을 타인을 위한 책임, 공동체 역량의 학습, 시민으로서의 능동화 등의 동기나 효과들과 연결시킨다. 시민참여(Bürgerchaftliches Engagement)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담하거나 사회적 정치적 목표들을 가진 조직들에서 활동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여가, 운동, 사교모임 등을 통해서도 시민참여는 발전할 수 있다. 무보수 봉사활동이 예전과 다름없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시민을 위한 단체들이 여전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이 수정된 시민참여 개념은 스스로의 이해를 좇아 시민과 공익에 대한 의무를 망각하는 참여 형태들을 비판할 수 있게 해 준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의 모범을 시민들이 민주적인 규칙에 따라 스스로를 조직하고 공동체의 운명에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체로 상정하고, 모든 시민들이 만들어 가고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의 체계라는 의미에서 ‘관계틀(Bezugsrahmen)’이라 부른다. 시장과, 국가, 가정의 긴장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연대가 생겨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고 시민이 공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시민사회를 찾아볼 수 있다.

② 다양한 유형의 참여(Engagement)

참여는 통상 한 개인의 규칙적인 자원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참여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용기 있는 시민정신, 부정기적인 동참, 성금, 시민재단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것, 어떤 조직이나 시민단체들에 관심을 갖는 것 등은 참여로 나아가는 한 방식이다. 위원회는 이 다양한 표출 형태들을 취합하고 가치를 부여하려

노력했다. 이 확대된 행위 레퍼토리와 고취된 자신감이 능동적인 시민 사회의 잠재력을 형성한다.

③ 참여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호

위원회는 참여시민들의 활동을 위협과 피해상황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제로 참여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기서 발생된 지출을 가급적 보상해 줄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여자들의 독립성은 유지되어야 하며 해당 활동을 인정한다고 해서 당사자의 생계노동 영역에서 유급으로 보상받아서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원회는 당시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시민참여 활동시간의 연금점수 가산제를 반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보수, 자원, 공익이라는 대 원칙 하의 참여가 생계노동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정(認定)은 시민참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위원회는 시민참여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고무하며 여론을 통해 널리 알리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인정문화의 성장을 목표로 삼는다.

④ 참여증진을 위한 복합적 정책 마련

종종 인용되곤 하는 시민 참여를 위한 정치적 여건 개선은 재정지원이나 개별 참여자들이 안고 있는 법적 지위 문제들의 해결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효율적인 참여 증진에는 명예, 인정 등의 일반적인 조치도 포함되며 추가적인 수단들과 토대들도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 활동과 결심의 문화를 주요 생활영역들과 제도들에 더욱 선명하게 각인하는 것이다. 시민참여를 위한 여건들은 정치와 보건, 사회, 노동, 문화 등 개별 행위영역에서도 개선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고객과 손님으로서 영향을 받게 만 할 것

이 아니라 공동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발언하고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참여증진은 이런 의미에서 복합적인 과제이다. 정치에서는 특히 관할 부처의 특수한 해결책들을 시민사회 증진이라는 관할부처를 뛰어넘는 복합적인 과제와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⑤ 시민참여와 근로여건의 변화

직업사회의 변화는 노동사회의 추이에 따라 시민사회 또한 바뀐다는 것을 보여준다.¹⁶⁾ 노동세계의 주 행위자인 노동자와 기업, 노조, 기업인연합들은 스스로를 시민사회의 행위자로 이해하고 이에 걸맞게 행동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생계노동과 참여의 관계에서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시민참여가 일자리 감소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생계노동으로의 통합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이나 사회 복지의 분배, 시민참여의 통로 등의 측면에서 변함없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동독과 서독에서의 경험들은 시민참여가 노동세계로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고 실업자들의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유연한 노동시간과 확대된 여가공간은 사무실과 회사 안팎에서 시민참여의 조건들을 호전시켜 준다. 기업인단체, 노조, 기업과 노동위원회, 나아가 입법자들까지도 생계노동, 가족, 시민참여의 합치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참여시민으로서 경험을 쌓고 사회적 자질들을 수련한 사람들은 이 자질들을 업무에도 끌어드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위원회는 독일 기업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기업시민성(corporate citizens)’을 고취시킬 수 있는 모든 기획과 노력들을 지원한다.

¹⁶⁾ 노동구조의 변화에 따른 시민참여의 변화에 관해서는 (Böhnisch and Schröer 2004; Gensicke 2006; Brömme and Strasser 2001; Fatke et al. 2006; ARD 2009) 등을 참고.

⑥ 참여 지향적 제도와 조직

제도의 참여지향성 여부는 참여 자발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복지단체 등의 제3섹터 조직들에게 뿐만 아니라 학교나 유치원 등 국가와 지역의 공공시설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공공영역에서 시민의 참여와 동참은 시민참여 증진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주거지역개선이나 보건의분야 등 모든 형태의 개선과정에 시민참여 지향적인 계획과 결정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래서 위원회는 시민 참여와 시민사회의 개념이 주거, 문화, 도시개발, 학교, 교육 등 주요 생활영역과 정치영역에서 지도 원리로서 더 큰 의미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⑦ 시민과 국가의 양자 전략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광의에서 정치의 몫이다.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국가와 직업 정치,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 스스로의 주도가 필요하다.

‘가능하게 하는 국가’는 시민과 시민조직들을 국가의 잔소리와 관료주의적 과다통제에서 풀어주는 데에만 맞추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과제들을 책임감 있게 넘겨받을 수 있는 틀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의 자원과 역량의 강화는 이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가능하게 하는 정치란 또한 기존의 과정과 참여형식으로는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던 그룹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와 전략들을 발전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시민들의 참여와 용기로 문제들이 알려지고 난 후 국가의 정치가 관심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위원회는 국가와 시민 양쪽 모두에게 ‘자발적인 자기책임’과 협력을

북돋아줄 수 있는 정치형태에 특히 관심을 갖는다(Enquete-Kommission 2002, 6).

여론조사위원회는 정치참여에 대해 이상의 노선과 개념의 틀을 정하고 여기에 따라 연방정부, 각 단체들, 기업, 시민 등 제반 행위자 별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구체적인 조언들을 덧붙였다.

① 제도와 조직들

공익 지향적 시민참여는 시민사회의 핵심구성요소로 시민 조직들뿐만 아니라 국가제도들도 관련이 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의 단체와 조직, 재단, 교회, 노조, 법인 공법기관들이 시민 사회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참여를 ‘조직발전의 체계적 구성요소’로 삼을 것을 권한다. 조직구조의 현대화나 조직발전의 전반에 있어 참여 가능성을 증대하고 협력적인 조직구조와 지도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조직을 시민사회의 행위자로 인식하고 내, 외부로 개방하는 것이 핵심과제이다. 조직 내적 개방은 시민참여를 조직의 개념과 지도 원리에 포함시키는 작업이며 시민참여자와 공직자들의 협력적인 공조, 시민참여 관련 사안 결정시 시민 참여자들을 조직의 운영과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 등이 중요하다. 조직 외적 개방은 공동체 내의 타 행위자들과의 강화된 협력과 네트워크 형성, 참여 접근로의 개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처럼 이제까지 거의 대표되지 못했던 집단들의 접근을 용의하게 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학교와 학교의 개방은 시민참여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학교는 시민참여를 가르치는 교육장소임과 동시에 그 자체로 공동체에 열려 있는 시민적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는 자원의 관리와 실질

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에 더 큰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Enquete-Kommission 2002, 111).

② 시민중심 행정과 탈관료주의화

위원회는 행정을 시민에 맞춰 꾸려가고 시민들을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서비스의 동역자요 협력자로 볼 것을 당부한다. 나아가 지역에서의 시민코문 사상을 예로 들며 공무원들의 대민봉사활동을 강화할 것, 친절함 공무원들을 격려할 것, 시민들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안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것 등을 제안한다. 위원회는 또한 시민조직들에 더 많은 참여가능성을 열어줄 것과, 결정권을 탈 집중화할 것, 협상과정에 중재와 모니터링 등의 시민 지향적 행정 방식을 적극 결합시킬 것 등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관청들이 더 많은 투명성을 확보할 것과 국가 행정기구들이 시민참여자들을 계몽하고 조언해 줄 것 등을 언급했다.

③ 참여가능성 확충

위원회는 시민들의 참정권을 강화하고 새로운 참여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지역에서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결정 등의 직접민주주의 절차들을 더 빈번히 활용하고 지방의회를 개혁할 것, 비공식인 시민단체들과 도시포럼, 사회단체들에게 더 많은 참여가능성을 제공할 것 등을, 정당과 노조에는 새로운 회원방식을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 많은 회원들을 충원할 것을 권했다. 더불어 유럽과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국제조직들이 비정부조직들에게 관심사들을 개방할 것과 시민사회 포럼을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④ 시민교육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가정, 교육시스템, 생계노동의 현장에서

참여증진을 위한 여건, 기회구조, 교육과 경험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회구조들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확보하고 시민참여를 교육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젊은이들이 적극 참여하는 사회활동 또는 생태활동도 시민 참여를 위한 중요한 교육현장이다.

⑤ 네트워크 형성과 토대 구축

시민참여는 지역별, 사회별, 관심영역별로 다양한 층에서 공론화되고 대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자원들을 함께 묶고 시민사회의 행위자들과 조직, 제도들의 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시민참여를 사회적으로 평가하고 적합한 증진책을 개발, 실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⑥ 기업시민성의 강화

점증하는 노동 강도, 유연화, 다원화, 탈경계화 등의 생계노동 양상 변화에 따라 기업 역시 시민참여 형성과 증진에 일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략에서는 기업문화를 이윤획득에서 공익으로 전환시키고 기업들이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직원들의 시민참여 증진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행사한다.

⑦ 공익법과 기부법의 개정

위원회는 현행 독일의 공익법(Gemeinnützigkeitsrecht)과 기부법이 공익증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민 참여자와 단체들이 실제로 혜택을 받고 반대로 공익증진에 유명무실했던 단체들은 더 이상 특혜를 받을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⑧ 보호와 보상

위원회는 가장 현실적이며 절실한 과제의 하나로 국가와 시민사회 조직들, 보험사들이 협력하여 시민 참여자들과 단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의 책임보험과 사고보험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활동경비 지출로 인한 시민참여 행위자들의 재정적 손실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공익단체나 법인들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권하고 있다.

⑨ 시민참여에 관한 지식확대

시민사회에서의 시민참여와 그 역할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경험적 지식에 근거한 이론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위원회는 연구 활동의 확대를 요청한다. 주요 연구 활동으로는 시민참여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참여를 위한 제도적 조직적 조건 등이 선정되었다.

⑩ 시민참여의 항구화

위원회는 지속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구조의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연방 정치가 시민참여에 부단한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에 시민참여 상설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Enquete-Kommission 2002, 7-11).

5. 나가는 글

생활정치는 어디에나 편재해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들, 개인화된 자율적인 인간들, 국가와 정부, 그리고 시장과 시장이 제공하는

자유로움과 부도덕 사이를 부유하고 있다(Hoikkala 2000). 가장 느슨하고 부드러운 정치형태이며 그 형태의 연성만큼 개념 또한 불명확하다. 생활정치가 후기 근대사회의 주된 정치 형태로 자리 잡으려면 성찰의 능력을 갖춘, 하지만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개인들을 한데 묶어 개개의 단순한 생활스타일을 정치화 과정이 필요하며, 이 작업을 위해 시민사회와 시민참여의 활성화는 필수불가결하다.

해방정치의 과제들은 이미 완전히 달성된 것이 아니며 생활정치 역시 완결된 형태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생활정치는 권력 획득을 위한 수단의 정치, 빈곤과 차별의 철폐 등을 목표로 삼은 목적의 정치 등과 구별되는 과정의 정치로서 기존의 정치 의제들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다. 생활정치에 의한 해방정치의 초월 또는 해방정치와의 단절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해방정치는 특정 행위자나 행위자 집단에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고 목적이 달성되면 종결되는 한시적 정치라면 생활정치는 개인, 단체, 사회, 국가, 나아가 세계 공동체가 각 행위자가 처한 지금의 현실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끊임없이 재구성하므로 행위자에 따라 구분하자면 모든 행위자를 포함하는 일반정치이며, 시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무한의 정치이다.

생활정치는 우리에게 “항상 스스로 생각하라”는 계몽에 관한 칸트의 금언을 상기시켜 준다. 기든스가 직접적으로 표현한 바는 없지만 그의 근대 비판은 근대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것, 즉 자성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었고 근대의 제반 문제들 또한 이 자성의 결핍에서 기인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이 근대는 근대의 정언명령을 성실히 좇아 발전, 진보, 개발에 매진했지만 이 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또 제기할 수도 없었으므로 여전히 ‘미성년’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든스의 시대구분에 따르면 후

기 근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근대는 이성의 작동을 통해 스스로 성찰하게 되었으며 후기 근대를 살아가는 개인들 또한 체계의 지시가 아닌 자신의 이성을 통해 성찰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게 된 것이다.

미성숙의 원인이 이성의 결핍에 있지 않고 타인의 지도 없이 이성을 활용하려는 결단과 용기의 부족에 있다면, 이는 스스로에게 빛진 미성숙이다. Sapere Aude! (감히 알려고 하라) 네 자신의 이성을 활용할 용기를 가져라! 이것이 바로 계몽의 모토이다(Kant 1784).

(2009년 9월 10일 접수, 2009년 11월 16일 채택)

참고문헌

김호기. 2008. “촛불집회, 거리의 정치, 제도의 정치: 서울 광장에서 그람시와 하버마스를 다시 읽는다.” 세교연구소,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27, 참여사회연구소, 코리아연구원, 경향신문 공동 주최 긴급 시국 대토론회 자료집. 『촛불 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2008년 6월 16일. 25-33.

ARD. 2009. “Was ist bürgerschaftliches Engagement?” Der Online-Blog zur ARD-Themenwoche. Available at: http://web.ard.de/themenwochenblog/?page_id=345 [Accessed October 11, 2009].

Beck, Ulrich. 1996a. “Der clevere Bürger: Bemerkungen zu Anthony Giddens' Konzeption “reflexiver Modernisierung.” Soziologische Revue: Besprechungen neuer Literatur, Jg. 19(H. 1). 3-9.

Beck, Ulrich. 1996b. “Die Subpolitik der Globalisierung. Die neue Macht der multinationalen Unternehmen.” Gewerkschaftliche Monatshefte H. 11/12. 673-680.

- Beck, Ulrich. 1997. Was ist Globalisierung. Frankfurt/M.: Suhrkamp.
- Beck, Ulrich, Anthony Giddens, and Scott Lash. 1996. Reflexive Modernisierung : eine Kontroverse. 1st ed. Frankfurt am Main: Suhrkamp.
- Berger, Peter A. 1995. "Life politics: zur Politisierung der Lebensführung in nachtraditionalen Gesellschaften." *Leviathan: Zeitschrift für Sozialwissenschaft* Jg. 23(H. 3). 445-458.
- Böhnisch, Lothar, and Wolfgang Schröer. 2004. "Bürgergesellschaft und Sozialpolitik."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4. 16-22.
- Brömme, Norbert, and Hermann Strasser. 2001. "Gesplante Bürgergesellschaf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5-26. 6-14.
- Burkitt, Ian. 1992. "Beyond the 'ironcage': Anthony Giddens on modernity and the self."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5(3). 71-79.
- Caron, Bruce. 2003. "Projects of the self/Projects of the state." Available at: <http://junana.com/CDP/corpus/COMMENT6.html> [Accessed October 10, 2009].
- Enquete-Kommission. 2002. Zukunft des Bürgerschaftlichen Engagements. Berlin: Deutscher Bundestag.
- Fatke, Reinhard et al. 2006. "Jugendbeteiligung - Chance für die Bürgergesellschaft."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APuZ* 12(Bürgerschaftliches Engagement). 24-32.
- Ferguson, Harry. 2001. "Social work, individualization and life politics." *Br J Soc Work* 31(1). 41-55.
- Garrett, Paul Michael. 2003. "The Trouble with Harry: Why the 'New Agenda of Life Politics' Fails to Convince." *Br J Soc Work* 33(3). 381-397.
- Gensicke, Thomas. 2006. "Bürgerschaftliches Engagement in 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12(Bürgerschaftliches Engagement). 9-16.
- Giddens, Anthony. 2003. "An Interview with Anthony Giddens." *Journal of Consumer Culture* 3(3). 387-399.
- Giddens, Anthony. 1999. Der dritte Weg. Die Erneuerung der sozialen Demokratie. 2nd ed. Frankfurt/M.: Suhrkamp.

- Giddens, Anthony. 1995. *Konsequenzen der Moderne*. 2nd ed. Frankfurt/M.: Suhrkamp.
- Giddens, Anthony.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1st e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bermas, Jürgen. 1985. *Die neue Unübersichtlichkeit*. Kleine Politische Schriften V. Frankfurt/M.
- Habermas, Jürgen. 1973. *Kultur und Kritik*. Frankfurt/M.
- Habermas, Jürgen. 1982.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Darmstadt u.a.), Luchterhand.
- Habermas, Jürgen.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 2: Zur Kritik der funktionalistischen Vernunft. Frankfurt/M.
- Hoikkala, Tommi. 2000. "Life politics and/or solidarity." Available at: http://www.alli.fi/nuorisotutkimus/hoikkala/life_politics.html [Accessed October 10, 2009].
- Kant, Immanuel. 1784. "Beantwortung der Frage: Was ist Aufklärung?" *Berlinische Monatsschrift* Bd. 4. 481-494.
- Roos, J. P. 1999. "Life politics: more than politics and life (style)?" Available at: <http://www.valt.helsinki.fi/staff/jproos/sicinski.html> [Accessed October 10, 2009].
- Shaw, Martin. 2000. *Global Socie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Sociological Concepts and Political Perspectives*. Online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Available at: <http://www.sussex.ac.uk/Users/hafa3/globalx.htm> [Accessed October 12, 2009].

Thought of Life Politics and the Reality

Chang-Hoon Seo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the definition of life politics which are used in Korea very confusingly. The first half of this article, in order to understand the right concept of life politics, introduces the concept of life politics which Giddens used first in Western Europe and other related concepts such as reflective modernization, globalization, emancipatory politics, subpolitics so on. Afterwards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politics and Habermas' concept of lifeworld will be turned out.

In the second half of this paper will be asked which conceptual element the life politics lack. The Answer is the forming of solidarity through a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nd civic engagement which one can recognize in the German politics for the civil society.

Key words: Life politics, emancipatory politics, subpolitics, reflective modernization, globalization, lifeworld, civic engagement, civil society, German parliament, Giddens